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반영하라” 개정된 동물보호법 대시민 홍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 지역현안 3건 안전 의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 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6일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린 제276차 월례회에서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도 26호선은 국도의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지만 진안부귀~완주소양 구간은 당초 터널 개통 방식에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도로로 개설되었다"며 "실제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공사로 도로에 급커브와 급경사가 이어져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60KM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전북 동부권 3개 시·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날 관외경작자 직불금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6일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제도 개선 또한 촉구했다. "농·어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중인 공익직불금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제지역에 거주하는 시·군민의 경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시·군이나 도의 정책에

따라 관외경작자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동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 발전을 위해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무주 태권시티 완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등 법령 홍보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령의 시행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과 동물 관련 영업장을 찾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홍보를 통해 달라진 동물보호법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동시에 현수막과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 하며, 양육 시 2m 이하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 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맹견 외 반려견이 단독으로 사유장소를 이탈할 경우 행정 제재가 어려웠으나, 관련 규정이 신설될 만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

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등록업으로 분류된 수입·판매·장표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됐으며, 생산·판매·수입업의 경우 반려견 거래 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외에도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동물 학대 발생시 피학대 동물의 최소 격리기간이 3일에서 5일 이상으로 늘었고 반환 시 사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동물 학대에 대한 사후 조치도 강화됐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위반행위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전면 개정이 동물복지 인식개선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추가 지원

전주시가 불안정한 국제유가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주시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총 2개월간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라 신청 농가 당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1리터당 경유 200원, 휘발유 153원, 등유 288원, 중유 155원, LPG 난방(차량) 159(46)원, 부생연료유 1호(2호) 288(216)원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적을 접수 받아 농업인 1752명에게 약 3억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옥기기자

청소 권역수거 안정화 위한 현장점검 강화

전주시, 1팀 1대행업체 점검 체제 구축 업체별 현황 점검 등 추진

전주시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 권역수거 안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권역 수거 방식은 일정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상의 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을 한 개 업체가 담당하는 책임 청소체계로, 성상별 수거 방식에 따른 잔존 쓰레기 및 취약지역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권역수거 추진 이후 시 자원순환본부와 완산·덕진구청 청소 관련 부서가 1팀 1대행업체 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업체별 폐기물 수거 지연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생활 폐기물 수거 민원의 주를 이루는 음식

물류 폐기물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수거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권역수거 안정화에 약 3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주 차에는 매일 업체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2주 차부터는 주 2~3회의 점검에 나서는 등 수거 체계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가 권역 수거 체계 시행 이후 이틀간 접수된 684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수거업체 직원들의 업무 및 수거 노선 미숙지로 인해 업무 처리 속도가 저하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권역 및 나권역의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시는 대행업

체가 책임을 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수거 방식 전환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 수거체계에 대한 홍보에 힘써왔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권역별 수거 체계 전환은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문제 개선을 위해 수년간 논의했던 것으로, 실제 시행은 처음이기에 행정·업체·시민 모두가 수거 체계의 안정화까지는 일정 기간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에서 수거 체계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여름철 약취의 주요 요인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저감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는 자원순환본부와 완산·덕진구청 청소 관련 부서가 1팀 1대행업체 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업체별 폐기물 수거 지연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주시, 벼 병해충 대응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하고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방제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벼 병

해충 공동방제는 지역농협과 연계해 이뤄지며, 오는 7월 말 1차 방제가 추진된다. 이후 출수기 전인 8월 중순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3차 방제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울여를 폭염과 잦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이번 공동방제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옥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